

대처 사망
노동계급을
증오한 지배자

▶ 10 면

이론
제국주의와
'불량국가'

▶ 4 면

'중북' 마녀사냥
국가보안법이
노리는 것

▶ 6 면

세계경제
양적완화와
아베노믹스

▶ 7 면

신간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 13 면

발행인_김안식 편집인_김안식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주)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1772005 821003 16

Left21.com

제102호 | 2013년 4월 15일 ~ 4월 28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 관련기사 3, 4, 5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 관련기사 8 ~ 9, 16 면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어떻게 마거릿 대처를 추모해야 하나
고요? 그의 장례식을 민영화합시다.
경쟁 입찰에 맡겨서 가장 싼 입찰액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런 것을 원했을
듯합니다.”

영국 좌파 영화감독 켄 로치

“멀리 있어도 무선으로 다 통하고 텔
레파시로 통한다.”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경재가
박근혜와 대화하는 법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류길재 장관도 종북의
트로이 목마인 것 아니냐.”

대화 제의에 '멘붕'을 일으키는 극우익들

“이 지역의 귀염둥이로, 국회의원으로
태어나고 싶다.”

살인 진압과 용산 부도의 책임자
새누리당 노원병 후보 허준영

“성인 인증 없이도 접근 가능한 웹문
서들의 선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nud사진을 훑어본 것 ... 스마트폰 관
련 청소년보호법안을 발의 준비 중”
심재철 이렇게 깊은 뜻을 몰라 본 우리가 죄인?

“꽃을 심겠다고 사람을 철거하다니.”
한 네티즌, 쌍용차 분향소가 철거되고
화단이 조성되자

“첫째, 창안자도 그 개념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답답해서 그 주변인이
나 지지자에게 물어보면 화를 낸다.”

한 네티즌이 설명한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안철수 ‘새정치’의 공통점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무
기밖에 없다.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정몽준의 광기

“만약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는 어린이 동화 수준으로 비취질
수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첫째로 유명한사람이어야하고, 둘째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 남한
의 이념을 방해하는 [사람 혹은 단체]”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이 내린 ‘중북의 정의’

법정에 올려퍼진 쌍용차 투쟁의 대의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연대는 무죄입니다”

박근혜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뒤집
은 것도 모자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위법적·폭력적으로 철거했고, 쌍용차 노조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하려 했다. 그뿐 아니라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려 사회
적 분위기를 위축시키려 한다. 쌍용차 투쟁에
연대해 온 <레프트21> 기자의 법정 투쟁기를
소개한다. 두 글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
(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

<레프트21> 기자 성지현 동지는 지난
해 5월 19일 쌍용차 범국민대회를 참가
하고 거리에서 행진을 주도했다는 이유
로 벌금 2백만 원에 기소됐다. 정당한 집
회에 참가한 ‘죄’로 ‘벌금 폭탄’을 맞은 것
이다. 4월 5일 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법정 분위기는 매우 권위적이었지만
성지현 동지의 최후진술은 엄숙한 척하
며 위선 떠는 검사에게 통렬한 일격을 가
했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고 사회
적 연대를 만들려는 집회에 참가하고, 도
로에서 행진한 것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탈세,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특혜는



박근혜는 꽃밭이 아니라 노동자의 “무덤”을 만들었다. 6일 밤 대한문 앞에서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서 쌍용차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앉아 있다.

기본이고, 별장 게이트 성접대 의혹을 받
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 사회의 고위
층으로 명명거리며 사는데, 저와 같이 정
당한 일을 한 사람을 단죄한다면, 과연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지현 동지가 검사의 면전에 속 시원
하게 쏘아 붙이자 검사는 얼굴이 완전 일
그러져서 성지현 동지를 잡아먹을 듯이
짜려봤다.
박근혜 정부의 “법과 질서”의 역겨운
위선을 폭로할 때 ‘힐링’이 되는 기분이

검찰에 일격을 가한 성지현 기자의 최후진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쌍용자동차 정
리하고 사태’와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쌍용차의
재무 상태가 취약해지자 사측은 노동자
2천6백46명을 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
은 “함께 살자”고 말했지만, 사측은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당
시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먹
튀”와 회계조작을 했다는 정황도 밝히 드
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
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하고 이후 현재까지 자살
하거나 사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23명
입니다. 게다가 쌍용차 노동자들은 단지
해고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반대
투쟁 속에서 인간사냥 같은 어마어마한
국가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쌍용차는 경제 위기 속 구조조정
의 시험대였고, 이명박 정부는 노동 유연
화와 노조 죽이기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
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용
차에서 일어난 23명의 죽음은 단지 우연
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난해 3월 쌍용차에서 22번째 죽음

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였던 노동자들
은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그리
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
한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쌍용차 이야기를 다룬 공지영 씨
의 르포 《의자놀이》가 출판됐고, 단숨
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시민·사
회·노동 단체 67곳이 모여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구성했고,
22번째 희생자의 49재에 맞춰 5월 19일
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를 호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도 ‘5·19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정의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고 사회
적 연대 만들려는 집회에 참가하고, 도로
에서 행진한 것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
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후 첫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지만, 당선하자마자 이 약속은 휴
지통에 버려졌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
하며 철탐에 올라간 노동자들은 1백 일이

훌쩍 넘도록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구청이 기어이 정리
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거점인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습
니다.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마
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고,
거리로 나오고, 행동하고, 이 문제의 책임
자인 정부와 쌍용차 사측에 항의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
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벌금을 내린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
떻게 되겠습니까?
탈세,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특혜는
기본이고, 별장 게이트 성접대 의혹을 받
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 사회의 고위
층으로 명명거리며 사는데, 저와 같이 정
당한 일을 한 사람을 단죄한다면, 과연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열심히 일
했지만 휴지처럼 버려진 한국 노동자들

들 정도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절한
죽음의 행렬에 대해 말할 땐 방청하는 사
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한 코끝을 어루
만지기도 했다.
최후진술이 끝나자 법정엔 있던 사람
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법원 직원이
“박수 치지 마세요!” 하고 제지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검사는 약이 바짝 올라서 다음 피고인
이 피고석에 올라왔는데도 우리를 노려
봤지만 우리는 사기충천해서 법정을 나
왔다. 아직도 그 통쾌함이 가시질 않는
다.
우연히도 같은 법정엔 쌍용차 해고자
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유센터 ‘와
락’의 정혜신 박사가 계셨다. 정혜신 박
사도 최후진술이 끝나자 성지현 동지에
게 미소 지으며 손을 높이 올려 박수를
보냈다. 재판이 끝나고 정혜신 박사가 대
견하다며 성지현 동지를 와락 안아 주셨
다. 그리고 쌍용차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자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열심히 싸워
보자” 하고 의지를 다졌다. 마음속에 무
언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다.

양효영

의 자화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정리해고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는 “함께 살자”는 외침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저의 집회 참가와 행진은 정당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진주의료원 휴·폐업 반대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4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경남도청 앞
주최: 민주노총

노동3권 보장!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일시: 4월 28일(일) 오후2시
장소: 서울 보신각
주최: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가주공동연, 인천
이주운동연대,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일시: 5월 1일(수) 오후3시
장소: 서울 서울광장(전국 동시대발)
주최: 민주노총



99퍼센트의 눈

용산 노름판 뒷 이야기

4조 원의 혈세를 땅 투기꾼과 토건족들에
게 쏟아 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취소
됐다. 그 후 이 땅에 남은 것은 이 노름판들의
이윤 보전을 위한 서울시의 채무 이행의무,
이 노름돈 빌려 주던 은행이 가져갈 지분, 가
구당 수억대의 대출상환의무 그리고 주민들
간의 불화와 떠난 빈집들만 남았다.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사기도박
에 없는 사람들만 웃고 울다가 죽어 간다.

서울 이촌동의 전경 / 글·사진 이윤선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4월 29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넌편 오아시스 빌딩 앞 19:00~20:00
울산 현대차 4광장 구 정문건넌편 14:45~15:45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4월 30일)

서울 강남역 11번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출구 19:00~20:00
수원역 지하상가 1번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출구 19:00~20:00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104호 부터는 격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격주 목요일 (다음 가판은 5월 2일)

부산 서면 주디스테화백화점 앞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29일~30일)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월요일 11:20~12:20
부산대(부산) 정문 앞 화요일 11:50~12:5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화요일 11:30~12:30
국민대(북악) 복지관 1층 화요일 12:00~13:00
인천대 학생식당 입구 화요일 12:00~13:00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절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현대차공장 앞)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김영익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최근 북한 당국은 “1호 전투군부대세”를 발령하며, “남북 관계는 전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의 이런 호전적 언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나 반제국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행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 언행은 원인이 기보다는 결과로 봐야 한다.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과 해마다 북한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는 남한 등에 현재 상황의 진정한 책임이 있다.

북한이 호전적 언행을 하는 뒷배경에는 최근 부쩍 거세진 미국의 압박이 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3월부터 시작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더 됐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최첨단 공격 무기들이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다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라는 것이다.

무력 시위

실제로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는 ‘첨단 무기의 전시장’이 돼 버렸다. 미국은 핵잠수함, B-5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언제든지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미국이 이번 훈련으로 ‘한반도 유사시 8시간 이내 핵 옵션 수행’이 가능한지를 점검했다고 지적한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말하는 미국의 위선은 정말 끔찍할 정도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재빨리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

심인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한반도 주변으로 옮겼고, 괌 기지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북한으로서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정세현)이라는 관측은 일리가 있다.

미국은 이번 무력 시위를 통해서 ‘핵우산’ 제공 의지를 보여 줘서 한국·일본 내 독자적 핵무장 여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에 자신의 힘과 패권을 똑똑히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지배자들의 굴복이 아니라 호전적 대응을 촉발했다.

즉, 위협천만만 무력 시위를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패권을 과시하려는 미국에 최근 상황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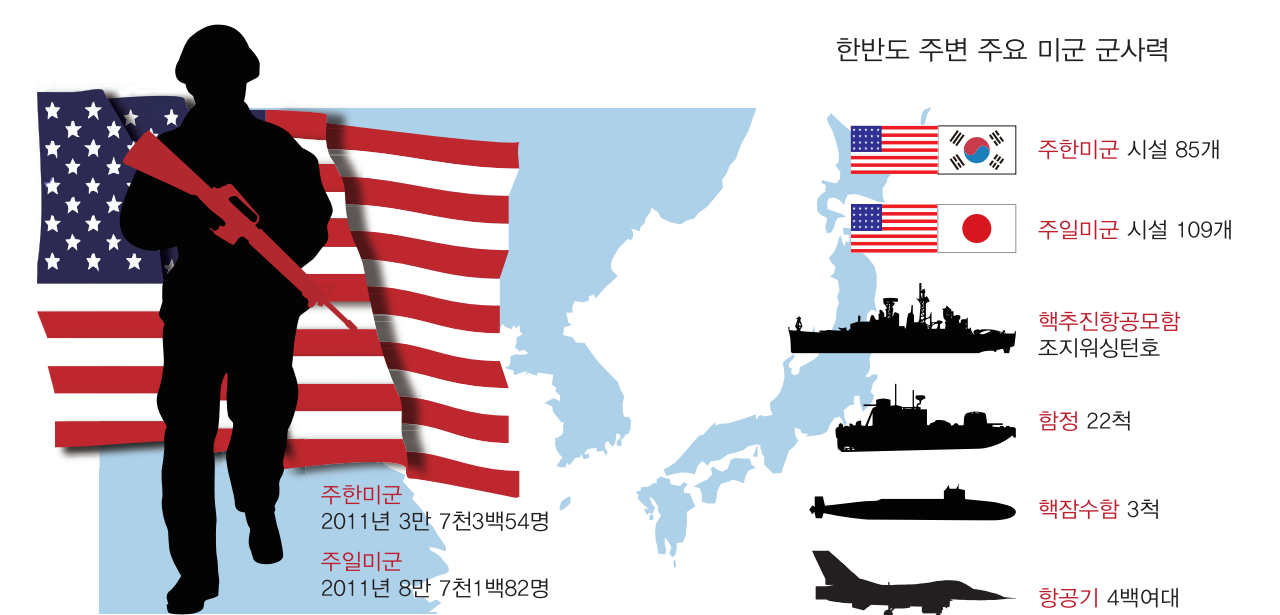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나, 자칫 인류 전체가 공멸할 뻔한 아찔한 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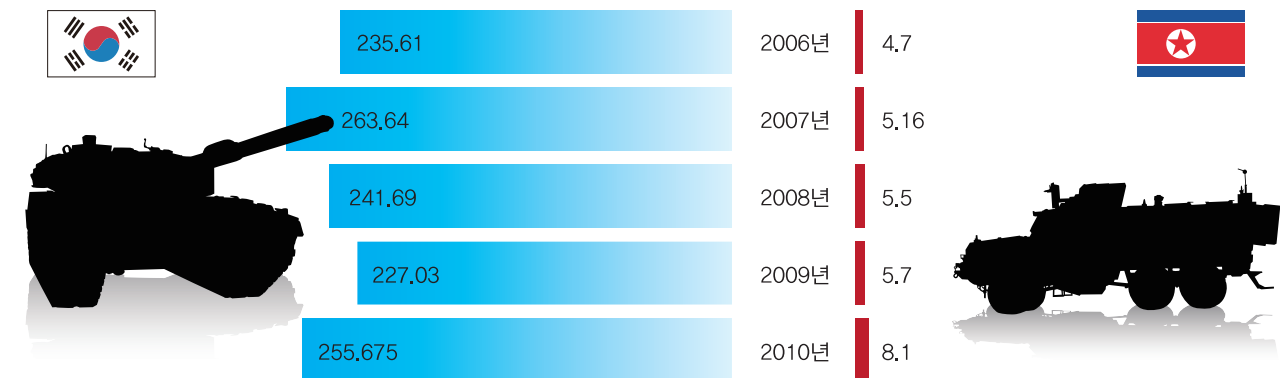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이



북한과 남한의 국방비 비교(단위: 억 달러)



인포그래픽 김영익, 장한빛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경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다음 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선포했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가입자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근도 “종북 엄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정보원 권한을 강화할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발의했다.

주요 권력기관에 ‘꼴통우파’ 심기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이 임명되면서 법무부장관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박한철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는 식의 우려프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일 검찰 인사에선 전교조와 촛불시위 탄압 수사에 앞장섰던 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한편, <레프트21>이 예상한대로 박근혜는 통치력 회복을 위한 사정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미 한국GM, LG, GS, CJ 등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열심히 뒤흔다고 해도 대기업주들이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우파와 여당 내에서도 불거지는 박근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 것이다. ‘4·1부동산 대책’에서 박근혜가 보여 준 것은 부자·재벌들을 위해 얼마든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자세였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 수습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요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 아니라 커지는 반감이 옮겨갈 대안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전제는커녕 대선 평가를 둘러싼 내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도 분열과 혼란이 이

어지면서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서울 노원병 보결선거에 출마한 안철수도 정작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하면서 파괴력이 약해지는 듯하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때 박근혜 지지 층에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시사적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놓고 복지부장관 진영,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서로 신경전을 벌인 것도 벌써부터 시작된 우파의 분열 조짐을 드러낸다.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탓에 이런 반감을 달랠 여유가 별로 없다. 게다가 사정 드라이브 과정에서 부패 추문이 폭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파적 일방통행은 오래 못 가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단결해 싸워 얻은 작은 승리가 정권을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변혁적 좌파들은 노동운동이 그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문성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②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 질서와 ‘불량 국가’

왜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것일까?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재를 싣는다.

미국의 북한 악마화는 냉전 해체 이후 제국주의 질서가 변한 상황과 관련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해 했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주장했다.

“냉전이 끝나자 일부 관찰자들이 ‘단극적인’ 세계 또는 ‘유일 초강대국’ 세계라고 부른 상황이 조성됐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냉전 초기와 달리 세계적 의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처지가 못된다. … 미국은 냉전기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경제적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경제 산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날 즈음엔 사정이 달라졌다. 그동안 미국 자본주의는 성장했지만, 유럽과 일본 자본주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했다. 중국은 선진국들보다 세 배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것은 냉전의 산물이었다. 당시 초강대국인 미국은 가장 많은 군비를 부담했다. 막대한 군비 지출 덕에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고 독일과 일본은 수출 시장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독일과 일본은 독자적인 대규모 군비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고 생산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독일 기업들 간의 경쟁은 각각의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를 두고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의 부분적 분리’라고 지적했다. 소련이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지도력 아래 단결한 것이다.



네오콘(neocon)

미국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혹은 그 추종자의 줄임말.

이들은 미국이 오로지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에 개입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부시 정권의 핵심 인물인 부통령 딕 체니, 국방부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 폴 울포위츠 등이다.

그런데 냉전의 해체는 이런 제약을 푸는 효과를 뒀다.

곧, 소련 제국의 붕괴는 “엄격한 양극적 세계 분할을 무너뜨렸고, 그럼으로써 두 초강대국이 아니라 다수의 열강들이 무대를 지배”하는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극화된 세계로의 복귀”(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알렸다.

미국은, 냉전기 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 있으면서 훌쩍 커버린 다른 열강들이 이제 자신에 도전할까 봐 우려했다.

그런데 미국에는 다른 주요 열강들이 갖지 못한 커다란 장점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막강한 군사력이었다. 미국의 지배자 일부는 이런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려면 무너진 소련을 대신할 새로운 ‘적’이 필요했다.

1990년대 초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새로운 위협이 지난 45년 동안 이어진 동서 대립 밖에서 출현했다”고 말했다. ‘불량 국가’는 미국이 만들어 낸 ‘새로운 위협’이었다. 이라크·이란·쿠바·북한 등이 지목됐다.

새로운 ‘적’

그래서 1990년대에 미국은 1980년대보다 군사 개입을 더 많이 했다. 미국은 ‘지역 강패’를 손보는 방식을 취했지만, 명백히 이것은 최강의 군사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들에 자신의 패권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대, 1991년 걸프전은 다른 열강들한테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미국의 힘에 의존해야 함을 일깨운 전쟁이었다. 발칸 전쟁(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은 유럽연합의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었다.

2003년 이라크 침략도 마찬가지였다. 2001년 9·11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네오콘*들은 이라크를 노렸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열강들이 의존하는 중동 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9·11 테러는 ‘올고 싶는데 뻘 때려 준’ 격이었다.

미국은 이런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이데올로기도 발전시켰다. ‘독재자’에게 그 나라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인도주의적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독재 정권 수립을 돕고 또 든든한 후원자 구실을 해 온 미국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게다가 미국의 개입이 낳은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학살과 야만 그 자체였다.



사진 출처: James Gordon

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불량국가’를 상대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패권을 지키려 했다 2003년 이라크에 쳐들어난 미군.

북한, 동아시아판 이라크

미국이 1991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지목한 ‘불량 국가’는 바로 북한이었다.

동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처럼 잠재적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을 넘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키웠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놓고 ‘너를 겨냥해서 포위망을 짜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미국에

매우 유용한 존재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지나치게 불거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엮포를 놓았다가 북한이 반발하면 양보 제스처를 취하며 시간을 끌고, 또다시 약속을 먼저 깨뜨리며 엮포를 놓는 식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물론 상황이 미국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회를 거듭할수록 강도 높게 반작용했다. 원래 핵이 없었던 북한이

2006년 10월에는 마침내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제는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북핵이 주변 다른 나라들에 핵무장을 부추긴다는 점도 미국에 골칫거리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제국주의 국가 간의 직접 충돌 가능성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현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오싷한 논리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박근혜는 당시 전부터 “우리에게 핵폐기물 처리는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보수언론들도 한미원자력협정이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며 한국은 “핵개발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박근혜를 거들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명분은 해마다 7백 톤 이상 배출되는 핵 폐기물을 더는 수용할 공간이 없고, 핵 폐기물의 매립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핵 발전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핵 폐기물은 재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처리되는 데에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 걸리며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토양과 물, 공기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핵 폐기물 더미들은 언제라도 폭발하



사진 출처: 김민준

박근혜가 원하는 핵 재처리는 일본 후쿠시마 핵재앙처럼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거나 새어 나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 지배자들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핵 폐기물

의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의 핵심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김태우가 “미국은 동맹국(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설득하려 한 것은 이들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 준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몽준은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핵연료 재처리권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핵무장의 집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심각해지는 동아시아의 군사 경쟁 속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의 야욕을 키우고 있다. 설사 미국이 용납하지 않아 즉각적인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일본처럼 핵무장의 잠재력은 보유하고 싶은 게 한국 지배자 다수의 열망이다.

극우 대표주자 조갑제는 “피를 흘릴지라도 위협과 부담을 당당히 감수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옹호한다.

이처럼 평화를 짓밟으며 핵전쟁 위험까지 불사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김승주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발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2009~11년 사이에 주한미군은 2만 6천여 명에서 3만 7천 명가량으로, 주일미군은 4만 1천 명에서 8만 7천 명 규모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연장로켓포(MLRS), 특수 지뢰방호차량(MRAP), 아파치 헬기 등의 무기들이 주한미군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지만, 당연히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배자들은 앞으로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할 듯하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자립적 핵동력 공업 발전’과 ‘더 발전된 위성들을 많이 개발·발사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빌미 삼아 동아시아 미사일방어 체계(MD) 구축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미국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50퍼센트 증강 배치했고,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도 예상보다 빨리 궤에 배치할 명분도 잡을 수 있었다.

3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단합된 동맹 전선을 유지하려고 한국, 일본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미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것은 중국 지배자들의 맞대응을 부를 게 뻔하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MD 구축을 서두르는 데 반발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MD를 무력화할 개별유도식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곧 성공할 것이라고 한다.

김영익



조영아 사진

존페의 기로에 처한 개성공단을 보면, 경제 교류 강화만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남북출입사무소 출입경 게이트.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장관 김관진은 유사시 특수부대를 투입해 개성공단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행태는 북한 지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대화 제의를 하는 등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계속 자극해 왔다.

이 속에서 북한의 김정정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 폭로된 것을 보면,

2010년부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연료봉을 미국에 넘겨줄 테니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미국은 한사코 이를 거절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호전성을 더욱 강화하기만 했고 그것은 남북한 민중에겐 큰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영익

한반도 긴장 고조가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핑계 삼아 국내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

조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벌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대외환경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미·중 제국주의의 간 갈등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는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커져 왔다.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추구해 온 한국 지배계급 안에서 ‘양다리 외교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근혜도 인수위 시절 미국보다 먼저

중국에 친박 실세 김무성을 대표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는 위기 고조 속에서 한미동맹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 주류 지배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 하위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박근혜는 바로 그들의 대변자다.

한편, 한·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의 우경화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대중의 반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지배자들에게는 이 또한 부담스러운 문제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북지

를 삭감해 군비를 늘리고, 제주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 지배자들은 이 틈을 타 핵무장야심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박근혜가 이명박과는 다른 것이라며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다.

한편, 박근혜의 ‘대화’ 제의는 우파 지지층의 강력 반발을 낳고 있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은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위기와 모순을 더 키우고 있다.

김문성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다.

북한의 핵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인 북한 관료들은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핵무장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3월 31일 북한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했다.

북한 지배자들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핵무기 덕분에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즉, 북한 지배자들은 핵무기 개발의 진

전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두 마리 토끼 잡기’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미국·남한과의 군사 경쟁의 압력 속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인민의 필요를 상당히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 북한 당국은 인민 대중의 불만에 대해 늘 고심해야 했다. 또한 국가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1970년대부터 만성적인 경제 위기에도 시달렸다.

김정은은 북한 지배자들의 오랜 딜레

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올해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8년 만에 늘렸다고 발표했다. 3월에 김정은은 포탄 생산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속에 북한이 단기간에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거나,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 지배자들은 고립에서 벗어나 시장 개방으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조심스럽게 계속해 왔다. 따라서

북한 지배자들의 처지에서 개성공단은 과거 ‘나진·선봉 무역지구’나 ‘신의주 특구’에서 최근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이르는 시장 개방을 위한 여러 시도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성공단이 존페의 기로에 선 것도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 재건 시도가 근본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북한 관료들은 노동자·민중을 더욱 억누르고 쥐어짜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고, 이것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김영익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국가보안법

성지현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안보’를 내세우며 ‘종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종북’ 마녀사냥의 가장 흉측한 무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해킹으로 공개되자, 국정원은 가입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선 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교조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제7조)”로 기소됐다. 현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제7조)”로 재판 중이다.

박근혜는 이런 공격을 하려고 수많은 의혹과 반대를 거슬러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황교안은 자신이 쓴 국가보안법 해설서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장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강[으뜸]법”이라고 말한다.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공안통’ 박한철 역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으뜸법’

사실 박근혜의 국가보안법 사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안정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며 거품을 물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해 95일 동안 국회 법사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박근혜처럼 국가보안법을 애지중지하는 우파 인사들은 흔히 이 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아무도 특정 사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문헌과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도 헌법에서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19조, 21조, 22조).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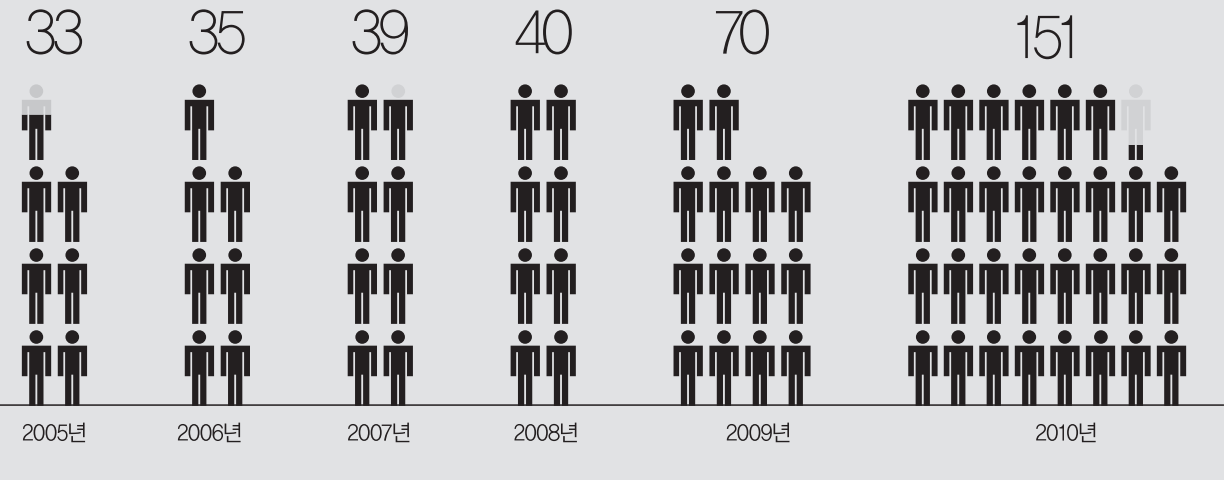
특히 국가보안법 7조가 그렇다. 7조는 정권과 체제를 비판하는 주장을 ‘반



사진 출처 Eric Drooker

2008년 촛불항쟁과 경제 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보안법 검거자



인포그래픽: 권인숙, 이매진

국가 단체 찬양·고무’로, 정권과 체제에 반하는 조직과 활동을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그런 내용의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고 판매하고 읽는 것을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는 집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게 “집입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

다. ... 수 틀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한 사람이 구속까지 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이런 일은 단지 ‘옛날 일’이 아니다. 2012년에도 트위터에 “제가 수령님 생각만 하면 주체주체하고 읊니다만” 등 풍자와 조롱을 목적으로 북한 관련 글을 올리고,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사회당 당원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런 황당한 사례들은 단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의 논리적 귀결이다. 뉴라이트인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말했듯이, ‘수사의 단조는 찬양·고무 행위의 동기를 살피고하면서 이뤄진다. 찬양·고무 죄가 없어도 공안 관련 수사의 대부분은 시작하기도 힘들게 된다.’

어떻게 수사기관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인터넷에 올린 글, 출판물에 실린 글, 모임에서 한 말 등이 ‘이적단체’의 단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도와 동기에 대한 자의적 판단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2004년 대법원 판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냉전입법이라는 뿌리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있는 좌파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3조 ‘간첩죄’로 처벌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간첩 사건들은 많은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온갖 협박과 고문을 통해 조작되거나 부풀려진 것이다.

더구나 1996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옛 이름)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북한 측에 판문점 근처에서 총격을 해달라고 몰래 부탁한 ‘총풍’ 사건은, 남북한 지배자들이 때때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한통속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 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단지 “남북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을 가로막는” 냉전 악법으로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 지금까지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의 약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제7조는 ‘국가변란

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들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았다. 북한과 연관 있는 좌파도 그들이 이 나라 노동자·민중 운동의 일부이고 그 요구를 대변하기 때문에 탄압받는 것이다.

국가변란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북한을 핑계 삼아 노동자·민중 운동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생과 65년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최근 국정원 전 원장 원세훈도 ‘종북 척결’을 내세우며 “북한과 싸우는 것보

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아래로부터 투쟁 덕에 노동계급의 조직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수가 계속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말한번 잘못해도 잡혀가는 ‘막걸리 국가보안법’ 성격이 짙었다면, 지금 국가보안법은 주로 친북 성향의 개인·단체나 혁명적 좌파를 겨냥한다.

그러나 이런 공격은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운동 전체를 분열·위축시킨다. 게다가 2008년 촛불 항쟁과 경제 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 권력, 기득권 체제를 지키려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8년은 제2·3항쟁과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있던 해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분단에 저항하는 민중항쟁이 거세게 일어나자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할 때 쓴 ‘차안유지법’을 고스란히 베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차안유지법

국가보안법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유감없이 달성했다. 1949년 한해에만 이 법으로 검거·투옥된 사람이 11만 8천6백 21명이고, 그 해 9~10월 사이에 정당과 사회단체 1백32곳이 해산됐다. 좌익수의 엄청난 증가 때문에 기존의 형무소는 물론, 판사까지 모자랄 지경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둘은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안법으로 합쳐진다)은 악명을 떨쳤다. 4·19 혁명 때 터져 나온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억누르면서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려던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반공법이 필요했다.

전두환도 저항이 분출했던 1987년 대대적으로 국가보안법 탄압을 벌였고, 노태우 역시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을 계기로 공안 정국을 조성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자, 노동운동 단체에 국가보안법 적용이 집중됐다. 1990년에는 구속노동자 4명 중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자유주의 정권들도 국가보안법을 버리지 못했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민중 운동을 두려워했고 억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모험을 하기보단 권위주의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 자신이 국가 탄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은, 재임 기간 동안 전두환 못지않게 해마다 많은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가렸다. 특히 IMF로 상징되는 경제 위기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구하려면 노동자들을 짓눌러야 했는데, 그 무기로 국가보안법이 요긴하게 쓰였다. 노무현 정부도 한미FTA 반대 운동과 반전 운동을 주도적으로 건설한 민주노동당을 겨냥해 ‘일심화’ 사건을 터뜨렸다.

기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이 증가했듯이(2007년 39명, 2009년 70명, 2010년 1백51명),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 지배자들은 이 더러운 칼을 휘둘러 수 있다. 박근혜 시대에 국가보안법 공격은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65년간 악명을 떨쳐 온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단체와 개인들을 정권의 차이를 떠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게 기대지 말고 진보 진영과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들이 세계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런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자유주의자가 됐다.

스톡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에서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국가가 사기업들을 떠받치는 “정실 자본주의”의 시대를 연 1933년부터 미국 경제의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이 “나라 망치기”는 2007~08년 금융 대란에 대응해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은행을 구제할 때 절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톡만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특별히 분노를 느낀다. “월스트리트 카지노를 후원하던 중앙은행 불한당은 예금주들을 제로 금리라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상품시장 거품을 키워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높이면서 중산층의 생활조건을 침식했다.”

달러를 다시 금에 연동시키자는 스톡만의 처방은 자유시장 공상주의의 전형이고, 오늘날 공화당 우파가 자유시장 공상주의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 6년 가까이 지나는데 동안 긴축재정과,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 “통화 행동주의”라고 부르는 것[통화정책 강화를 뜻함] 사이에 모순이 드러났다. 즉, 정부들은 공공지출과 공공부채를 줄여 국민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면서, 동시에 중앙은행을 통해 계속해서 금융권(결국에는 세계경제)을 부양하려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는 “양적완화”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양적완화는 중앙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이윤율이 낮으면 투자는 회복되기 힘들다.

은행이 정부채와 회사채를 구입하며 금융권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부실채권을 지급 보증하고 은행에 값싸게 대출해 주며 유로화가 폭락하는 것을 막았다(비록 키프로스가 유로화를 붕괴시키는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지만 말이다). 금리는 계속 매우 낮은 상태다.

화폐량

그러나 양적완화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4월 초에 있었다. 일본은행장 구로다 하루히코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학자가빈 데이비스가 계산하기에, 이 정책에는 2013~14년에 일본 국민소득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들이는 조치가 포함된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같은 시기에 추진하려는 양적완화의 세 배 수준이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대한 거품이 꺼진 이래 계속 정체했다. 신입 우파 총리 아베 신조는 무엇보다 화폐량을 대폭 늘려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구로다를 일본은행장으로 임명했다.

아베는 이 정책으로 다른 통화 대비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수출품 가격을 낮추길 바란다. 그러나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추동하려는 것이 아베만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는 양적완화로 달러를 싸게 만들어 “환율 전쟁”을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된다. 영국은행장 머빈 킹 역시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하겠다고 최근까지 공공연히 말했다.

스톡만 같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불평한다. 값싼 신용이 넘쳐나며 금융시장이 급팽창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영국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4월 초에 보고된 최근 미국 실업률 통계를 보면, 3월에 일자리 8만 8천 개가 생겼는데 이는 예측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세계경제 상황은 큰 틀에서 보면 급격한 폭락보다는 정체에 가깝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렇게 지적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대부분 확장하고 있다. 비록 기어가는 수준이지만 말이다. 유로존만이 눈에 띄게 수축하고 있다.”

양적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다. 화폐가 부족해서 경제가 성장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008~09년의 대불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짠다. 2002~12년 미국에서 중업원당 이윤이 갑절로 늘었다.

그러나 로버츠가 계산한 결과를 보면, 미국 이윤율(기업들이 투자한 자본량 대비 이윤)이 1997년과 2006년 수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이윤을 현금으로 쌓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참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48호 / 번역 차승일

운동 속의 논쟁

합의제가 연대체의 단결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가

진보진영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격에 맞서 공통의 과제와 요구(쟁점)를 중심으로 단결해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또,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그릇(연대체)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도 이런 연대체에 해당한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정책에 맞서 진보진영의 힘을 결집시키고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급진좌파, 시민단체, 지역 생협까지 포괄한 광범한 연대체다. 그만큼 민영화(사영화) 반대 목소리가 광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하기에 정치적 견해 차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령, 일부 환경 단체는 전기 요금 인상을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다수 단체들은 전기 요금 인상을 민영화(사영화)의 폐해로 지적하고 그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일부 단체는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공동행동’에 진보정당 참가까지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이 또한 대다수 참가 단체들은 지지하지 않았다. 물론 민주당까지 참가시킬 것인지 문제는 또 다른 이견이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행동통일을 추구하지만 특정 쟁점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그래서 광범한 세력을 포괄하는 연대체일수록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토론과 논쟁 그리고 다수의 지지에 근거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합의제’ 방식이 정치적 이견과 갈등을 피하고 단결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이며 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적

과연 합의제 방식이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데 더 효과적일까? 만약 일부 단체가 전기 요금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수의 입장을 무시한 채 ‘합의제’를 요구한다면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민영화(사영화)의 폐해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나머지 모두의 결정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없이 불등고 높아져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만약 연대체가 대중행동을 건설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서로의 견해만 확인하는 곳이라면 이런 ‘합의제’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우파에 맞서 공통의 과제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조직이라면 ‘합의제’는 운동 건설에 해악적일 수 있다. 그나마 잘되어야 모두가 동의할 만한 낮은 수준의 합의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또, ‘합의제’ 방식은 민주적인 운영방식도 아니다. 실제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한 단체만 정당 참가 배제를 주장했음에도 소수의견 존중을 이유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단체들끼리 비공식 논의 테이블에서 정당 참가 배제를 결정했다.

대다수의 의견은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토론과 논쟁 그리고 다수의 지지에 근거해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단결에 도움이 안 된다.

박근혜와 우파에 맞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연대체가 되려면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 행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최영준

경제 위기 책임 전가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3월 한 달, 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 · 유럽중앙은행 · IMF)가 키프로스에 1백억 유로(약 14조 7천억 원)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하면서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한 과세 등으로 68억 유로를 자체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키프로스 방식”은 지금까지 구제금융에서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한 것과 달리 예금자나 고액 채권자 등 은행 부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 부담을 지도록” 했다고 칭찬한다. “납세자 아닌 투자자에게 은행 부실 책임을 물어 ‘도덕적 해이’ 시비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키프로스 위기가 왜 예금자들 탓인가? 해외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와 자금 세탁처 구실을 한 키프로스 은행들은 급증한 자산을 그리스 국채에 투자했



저항에 나서는 키프로스 노동자들

다. GDP의 1.6배를 그리스 국채에 투자했다가 투자액의 70퍼센트 정도인 45억 유로를 손해 봤다.

은행이 그리스에 투자했고, 유로존 지배자들이 그리스 국제 손실 상각을 결정했고, 키프로스 대통령도 이에 동의해 줬다. 키프로스의 위기는 은행가, 키프로스 정부, 유로존 지배자들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은행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려 한다.

10만 유로

‘예금액이 10만 유로 이상이면 부자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에는 노동자들이 평생 모은 저축과 연금이 포함돼 있다.

정작 진정으로 돈이 많은 고위층은 자본통제 직전에 거액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키프로스 대통령 사돈이 소유한 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반대하며 키

프로스의 은행 노동자들이 4월 4일 2시간 파업을 벌였다. 지금까지 특별한 노사분규가 없었다고 알려진 키프로스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예룬 데이셀블룸은 “키프로스 해법은 향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키프로스 방식이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키프로스식 방식’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긴축안에 반대하는 키프로스 은행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키프로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로존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조치를 막아내고, 위기의 책임을 부자들이 지게 만드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나지현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보편적 복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선별적 복지)마저 없애려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려 한다.

사실 이런 불신이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역대 정부들이 대형 병원과 제약회사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면서도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아껴 왔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이래로 지방의료원은 늘 천한 신세였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지만, 1975년까지 정부 예산 중 의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퍼센트도 안 됐다. 1970~75년에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줄었다.

민간병원들은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돈을 갈취로 급어 모았다.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 제도 도입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것이었지만 모순이게도 이런 상황에서 고착화하는 구실도 했다. 지역과 확장 별로 나누어 있던 의료보험공단은 1997년 IMP를 지나면서 비로소 통합됐는데, 그 전까지는 공단 별로 재정 격차가 컸고 이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공공의료제도 개선'은 지방의료원 재정을 시·도 재정에서 분리해 '독자생존'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이 독자 생존하려면 민간병원처럼 수익성 위주로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 기능도 수행해야 했다. 결국 재정 상태는 나이지 않았다.

1990년대에 초대형 민간병원들이 세워지고 IMF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공공병원은 오히려 줄었다. 군산의료원은 1998년 원광대학교 병원에 위탁됐고, 춘천의료원은 2001년 강원대학교에 매각됐다. 제주의료원은 2002년 제주대학교에 병원을 매각했다. 대구 적십자병원

은 2010년 아예 폐원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전체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6퍼센트가 안 된다. 병상(침대) 수를 기준으로 해도 10퍼센트 밖에 안 된다. 이 중에 사실상 민간병원과

구분이 안 되는 국립대학교 병원을 빼면 그 비중은 훨씬 줄어든다. IMF 이후 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수익성' 논리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공공병원이더라도 '적자'를 내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쪼먹는' 파렴치한 짓으로 여겨졌다. 공공병원도 수익성을 추구해야 했고 그나마 규모가 크고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 병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소규모 지방의료원은 계속 외면 받았다. 국립대 병원조차 민간병원

보다는 구조조정과 돈벌이 전리로 내몰렸다.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가 크게는 반면 정작 필요한 부문에는 인력과 재정이 줄었다. 환자들은 입원 며칠 만에 단물을 빨아먹고 내뱉는 병원 측에 불만을 토로했고, 누적된 격무에 시달린 병원 노동자들은 이들의 합의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인건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려 한 영리 병원은 이런 추세의 극단을 보여 준다. 영리 병원은 민간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이는 주주들과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무상의료 등 복지 확대 요건이 사라진 것은 이런 추세에 대한 커다란 반감과 불만을 보여 준다. 박근혜조차 대선 후보 시절 복지 확대 공약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사실상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축소 계산하는 공수를 썼다. 그러나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재원을 늘려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익으로 돌아가 병원비를 낮추거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사실상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지난 몇 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이 커져도 보장성이 늘지 않은 위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상의료가 '필' 때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 아니라 병원을 매각했다. 대구 적십자병원

은 2010년 아예 폐원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전체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6퍼센트가 안 된다. 병상(침대) 수를 기준으로 해도 10퍼센트 밖에 안 된다. 이 중에 사실상 민간병원과

성공하면 그나마 얼마 없는 공공병원도 폐쇄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미 강원도의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삼척의료원을 없애려고 최문순 도지사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충남에서도 의료원을 통합 구조조정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과잉 진료를 일부 막는 구실을 해왔기 때문에, 이는 가뜩이나 비싼 의료비를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의료민영화 실패판이라고 하는 까닭이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늘려야 한다.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국립병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시·도립 병원들도 지방자치정부별 재정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과 불균등성에 맡겨두지 말고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폭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확대를 통해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비극이 사라질 수 있다. 민간병원들의 의료 상품화와 돈벌이 속에서 남비되는 재원은 이런 데 쓰여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선 투쟁과 그 성과는 바로 이런 과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호중



의료 시장화를 막기 위한 전초전 4월 6일 '돈보다 생명' 버스 참가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가한 진주의료원 환자들.

희귀 난치성 환자의 편지

진주의료원 폐업 꼭 함께 막읍시다

“진주의료원이 폐업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에 공공병원 하나 없어진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러나 그런 오산이었다. 진주에 공공병원이 없다면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 30여 곳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지배자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나는 12년 전 희귀난치성 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한 달 정도 입원했다. 그때 말(馬) 혈청을 이식 받았는데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들었다.

안타깝게도 말(馬) 혈청이식이 실패해서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중인데, 골수가

식 비용이 6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정도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비용이다.

이 병 때문에 면역력이 좋지 않아 감기만 걸려도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고, 다른 합병증에도 걸릴 우려가 있다. 지혈이 잘 안 돼서 출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몸인지만 의료비 문제에 민감하다.

시한폭탄

차상위계층인 나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어떨까. 희귀 난치성 질환만이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4대강을 파고, 국방비를 늘리고, 부자와

기업주들에게 특혜를 줄 돈 일부로 정부가 무상의료를 한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배자들은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려고 강성노조 운운하면서 환자와 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나아가 저들은 '공공병원의 몫을 영리 병원에 맡기고,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하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상생 할 수 있다'며 시커먼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좋아야 환자들에게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식 아닌가.

의료 공공성을 위해 모두가 단결해 싸워야 한다.

김문주

서명 | 《병원장사 —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보고서》

‘생명보다 돈’인 세상을 고발하다

장사, 상업, 빈가 자본주의의 음흉한 냄새가 풍기는 단어들이다. 저자인 김기태 기자는 《한겨레21》의 기획 연재물인 ‘병원 OTL’의 주요 기사들을 재구성해서 이 책을 내놓았다. 저자가 머리말에 쓴 것처럼 ‘병원들이 돈을 밝힌다’는 사실은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나 보호자들도 뻔하게 눈치채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폐이지를 넘길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병원 장사의 정황과 한국 의료의 현실은 읽는 이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저자가 직접 체험한 모의 환자 실험으로 시작된다. 쓸데없는 처방과 시술을 권하는 전문병원과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공공병원을 비교하며

병·의원들의 과잉진료를 폭로한다.

대형 종합병원과 동네 병·의원들이 서로 앞뒤 없는 경쟁을 벌이다 보니 환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의사들이 수익과 시간에 쫓겨 환자를 보고 돈이 되지 않는 입원 환자는 바로 퇴실 조치를 내려곤 한다.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를 높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기도 하지만, 의료를 흑자시켜 의료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해마다 무려 1만 7천여 명의 환자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해 보라,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일하는 전공의와 OECD 평균보다 5배나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가 어떻게 환자를 잘 돌



이갑산(79세) 환자 “죽어도 여서 죽을 겁니더”

23년 동안 여 있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죽어도 여서 죽을 겁니더. 딸 하나 있는 게 저 장례식장에 돈을 1백만 원을 맡겨 놔뒀니다. 아버지 죽으면 초상 치르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는 가면 병원비가 많아서 안돼요. 나는 한 달 있어 봐야 병원비가 20만 원 있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못 갑니다. 나는 죽어도 안 나갈 겁니다.



서혜성(66세) 환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오는 곳을 왜 없애니까?”

제가 12일 입원해 있다가 나갔는데 병원비가 2만 6천 원 나왔어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못살고,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오는 곳이 진주의료원입니다. 만약 폐업을 하면 집에 가서 죽어야지요. 혼자 사니까 어느 순간에 발목이 묶였으면 하는 바람뿐이죠. 가난한 사람을 머리 위에 철로를 놓고 기차는 달린다나. 진짜 홍준표 머리에 기차를 올려서 철로를 봐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정형준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 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 사회관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중시됐다.

영겔슨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에서 장티푸스, 결핵, 구루병의 병리와 역학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의학적 개입만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비르호(R. Virchow)는 실제로 지방에서 발생한 발진티푸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토지 개혁과 소득재분배, 주거 개선, 그리고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 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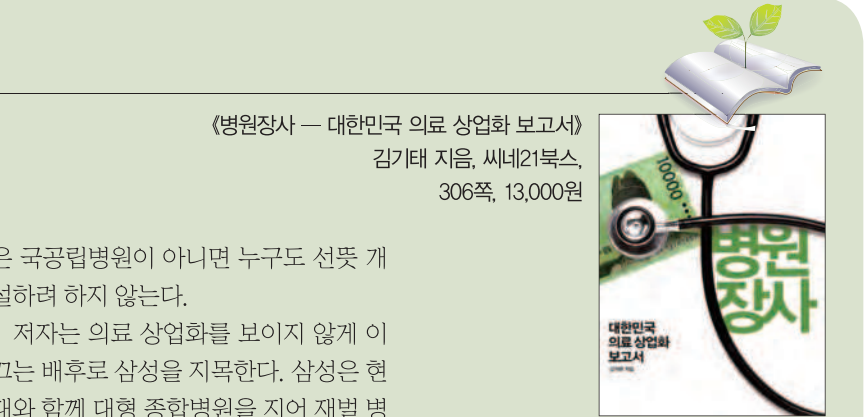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가 개인의 질병 치료로 협소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의료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면 결국 지배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질병의 원인을 세균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고 싶어 했다.

둘째는 의료를 더 쉽게 상품화하려는 시도 때문이었다. 질병의 원인이 개별 세균이나 개인의 생활학적 상태라면, 그 치료 방법도 상품으로 판매되기 적합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분화되고 각각이 가격이 쉽게 매겨졌다.

그러나 이런 개별 의료기술의 발전보다는 자본주의 생산 발달과 대중투쟁이 건강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수명 증가와 영아사망률 감소는 사실 영양상태,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향상된 덕분이었다.

또, 제2차세계대전 시기의 영국, 혁명 이후의 쿠바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 해결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묻는 분위기가 고조될 때 건강지표들도 향상된 바 있다. 그리고 서구의 ‘무상의료’ 제도, 한일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역시 대중투쟁의 산물이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의 해법은 ‘돈이 먼지인 세상’에서도 환자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싸우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무너지고 있는 의료 공공성의 중요한 보루인 진주의료원으로 가자, 박근혜도 멈출 수 없다는 홍준표의 탈선 기관차를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복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 저자의 말마따나 ‘돈이 먼지인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를

오현승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돌아보는 마거릿 대처

우리는 그를 영원히 살인자로 기억할 것이다

4월 8일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가 사망했다. 많은 영국인들은 대처의 사망을 기뻐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언론까지 포함한 한국의 주류 언론은 죄다 “영국병을 치유했다”느니 “영국을 구했다”느니 하며 대처를 칭송했다. 조중동은 노조를 파괴하고 운동을 탄압한 대처의 “리더십”을 배우라고 대놓고 주문한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자신이 ‘한국의 대처가 되겠다’고 자처해 왔다. 그러나 대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왜곡·과장이 심하다.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대처 집권 시절 영국 상황을 분석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마거릿 대처의 죽음을 맞이해 정관계와 주류 언론은 그의 “정치력”을 찬미하고 있다.

그러나 대처가 광원들한테 한 짓을, 그리고 다른 많은 노동계급 단체에 한 짓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를 살인자로 기억할 것이다. 시인 쉘리가 1819년 피털루 학살 뒤 보수당 정치인 캐슬레이 경을 살인자라고 지목했듯이 말이다. “나는 가는 길에 살인자를 보았네 / 살인자는 캐슬레이 가면을 쓰고 있었지.”

살인죄야말로 대처가 한 일에 걸맞은 죄목이었다. 때로 살인은 비유였다. 대처는 산업들과 공동체들을 박살냈고, 이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때로 살인은 현실이었다. 대처는 아일랜드에서 더러운 전쟁을 계속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 수감자들이 양심수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을 때, 대처는 양보하기는커녕 그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면서 자신의 냉혹함을 보여 줬다.

대처가 기형적 식민지를 무력으로 되찾겠다고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병사와 영국 병사 9백7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의 유산으로 영국이 말비나스 제도(포클랜드 제도의 아르헨티나 명칭)를 영유하는 탓에 양국 관계는 아직도 험악하다.

경제 위기

대처는 전쟁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대처는 1990년 11월 마침내 자신의 내각에 의해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조차,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대처는 도덕적으로는 경멸받는 인물이지만, 아마도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마지막 영국 정치인일 것이다.

대처가 총리가 된 1979년 5월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었다. 세계경제



사진: 폴 데이비스 / 게티 이미지

“우리 모두 자본주의의 모든 악을 대변한 인물이 죽은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날을 기다리며 축포를 아껴 왔다.” — 포클랜드 전쟁 참전 영국인.

는 1970년대 들어 두 번째 대불황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장기 호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였다.

경제 위기의 밑바탕에는 지난 호황기에 견줘 자본의 이윤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문제가 있었다. 수익성을 회복하려면 노동자 착취율을 끌어올려야 했다. 그러나 특히 영국에서 지배계급은 망치와 모루 사이에 낀 꼴이었다.

영국 지배계급은 호황기 동안 강력한 현장조합원 조직을 건설한, 잘 조직되고 전투적인 노동계급을 상대해야 했다.

광원과 향만 노동자들이 앞장선 영국

노동자운동은 1972~74년에 집권한 보수당 테드 히스의 공격 시도를 좌절시켰다. 1978~79년의 위대한 임금 투쟁(이른바 ‘불만의 겨울’)으로, 히스 실각 후 집권한 노동당이 도입한 사회협약’을 파기 시킴으로써, 영국 노동자운동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 줬다.

대처는 이미 1979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에도 “철의 여인”을 자칭하고 다녔다. 이 말은 지배계급의 정치를 호황기 때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전투적으로 바꿔 놓겠다는 뜻이었다. 대처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함께 매장됐던 자유시장주의 정설을 다시 고집해냈다.

대처는 나중에 ‘신자유주의’라고 알려진 것을 개척한 인물이다. 그는 오래지 않아 미국의 우파 공화당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엄청난데 막강한 동맹을 얻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대처보다는 덜 강력한 노동자운동을 상대했다. 1981년 1월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가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펴 야기한 혹독한 불황의 덕을 볼 수 있던 때였다.

대처와 그 추종자들은 대처의 용기를 칭송하길 좋아했다. 그러나 사실 대처는, 특히 집권 초에는 노동계급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때 이른 대립을 이래저래 회피하려 했다.

대처는 전임 총리인 노동당의 헤럴드 윌슨과 짐 킬러헌이 물려준 이점을 누렸다.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사회협약은 결국 실패했지만, 점점 더 관료화하던 고참 직장위원들은 사회협약을 계기로 사측과 국가에 협력하게 됐다.

기업주들은 이 덕분에 영국 레이랜드 자동차처럼 직장위원들이 아주 강력한 곳에서도 노동자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 버밍엄의 롱브리지 공장 노조 위원장이던 데릭 로빈슨은 현장에서 고립됐고, 결국 탄압 당했다.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는 흔히 부문주의가 연대 정신을 압도했다. 덕분에 대처는 1984~85년의 영웅적 광원 파업을 쉽사리 고립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처는 운이 좋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무기 제조업체들이 폭탄만 제대로 만들었어도 영국 함대는 대부분 남대서양에 수장됐을 것이고, 대처는 수처스럽게 사임해야 했을 것이다.

국내 정적을 또한 대처에게 행운이었다. 특히 노동당 정치인이 그랬다. 맨처음 상대한 마이클 풋과 그 뒤를 이은 닐 키녹은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말이 딱 어울렸다.

무엇보다 노조 지도자들의 무능력이야말로 대처에게 큰 행운이었다. 노조 지도자들은 광산 마을 주민들이 1년 내내 고립돼 싸우도록 방치했다. 이는 노동자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런 일이었다. 중무장한 경찰 기동대가 광산 마을을 점령하고 대처의 패거리인 파업 파괴자 조직을 만들었다. 절망과 궁핍에 광원들의 투쟁 의지는 꺾여 나갔다.

날아간 기회

그럼에도 대처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무엇보다 1984년 7월 파업 파괴 행위에 대응해 향만 노동자들이 전국적 파업을 일으켰을 때와 그해 가을 광산의 직·반장들이 조업 중단에 나서려 했던 때가 그런 기회였다. 두 경우 모두에서 노조 관료들은 대처를 구하려 나섰다.

대처는 이런 전투들에서 승리한 뒤로 시장의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1980년대 후반에 대처는 재무부 장관 나일절 로슨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 최초의 금융 거품 호황을 부추겼다.

그러나 결국 대처는 과욕을 부리다 실패했다. 자신감에 가득 찬 대처는 1989~90년에 인도세를 도입했다. 인도세는 지방정부 재정을 벌충할 요량으로 백만장자와 빈민에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세제였다.

사회적 불만이 갑자기 솟구쳤다. 런던에서는 1930년대 이래 가장 큰 소요가 벌어졌고 1천4백만 명이 인도세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보수당은 자신을 보호하려면 대처를 내쫓고 인도세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대처 집권기에서 끌어낼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우연히 대처는 자신이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복지 국가가 공격받는 시점에 죽었다.

더욱 거대한 사회운동을 건설해 보수당과 자유당의 연정을 끌어내리고, 대처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그의 관보다 더 깊이 묻어 버리는 것이야말로 노동계급이 대처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348호 / 번역 정중수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는 거짓말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대처가 “그냥 나라를 이끌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도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고 떠들고 있다.

우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좌파들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우경화를 정당화하곤 한다.

그런 좌파들은 노동계급 조직과 투쟁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들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주의가 퍼져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깎그리 없어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대처가 영국의 노동자, 특히 광원들에게 커다란 패배를 안겨 준 것은 사실이다. 이 패배로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크게 꺾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처가 영국의 노동계급을 완전히 박살낸 것은 아니었다. 광원들이 패배한 이후에도 중요한 파업들이 벌어졌다. 1988년에 포드 노동자들이 임금을 놓고 벌인 투쟁은 젊은 노동자들의 높은 전투성을 보여 줬다.

1989년에 런던지하철, 철도, 지방정부, BBC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임금 문제를 놓고 투쟁을 벌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한테서 더 높은 임금 인상을 따냈다.

1980년대 말에 대략 1천만 명이 노동조합원이었고, 그중 절반가량은 고용돼 있었다. 대처의 공격에도 영국은 노동조합 조직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

대처는 집권 기간 동안 영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다. 대처는 임금을 낮추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공공지출을 줄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자 임금을 20퍼센트는 삭감해야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처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처는 공공부문 임금을 깎으려 했지

만 실패했다. 전력 노동자들의 임금은 10퍼센트 넘게 올랐고, 구급차 노동자들의 임금도 7퍼센트 올랐다.

10퍼센트

공공지출도 원하는 만큼 줄이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에 국가총생산(GDP)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되레 늘었다.

소수는 많은 돈을 벌었고 몇몇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신용 거품 덕택이었고 그마저도 1980년대 말 거품이 터지자 경제는 다시 침체했다.

대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대처가 문제 해결에 실

패하자 보수당 내에서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대처를 버리게 된 것이었다.

영국 국민 다수가 대처의 사상에 동의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1987년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처를 지지한 사람은 소수였다. 이윤을 어디에 써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겨우 4퍼센트만이 주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처는 1983년 선거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지만, 겨우 9퍼센트만이 공공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처는 지배자들의 공격수로서 평범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공격했지만, 그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레프트21〉은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레프트21〉은 이명박 정부 때 몇 번이나 탄압을 겪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박근혜 시대에 더욱 악랄해질 수 있다. 그러나 〈레프트21〉은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다짐하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을 소개한다.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했다. 마르크스는 〈라이니세 차이퉁〉(라인신문)의 투철한 편집인으로서 겨우 24살인 1842년 10월에 창간해 1843년 봄 정권의 탄압으로 폐간될 때까지 독일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그리고 점차 성공을 거둔) 신문을 책임졌다. 그 때문에 마르크스는 번번이 프로이센 국가의 신문 검열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마르크스의 지적·정치적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 헐 드레이퍼가 지적했듯이, 〈라이니세 차이퉁〉을 편집하면서 “마르크스는 급진적 민주주의 자유주의자에서 혁명적 민주주의 공산주의자로 변모”했다.

마르크스가 철학자 헤겔에게서 물려받은 관념론적 세계관이 프로이센 국가의 물질적 실재, 그리고 점차 뿌리내리고 있던 자본주의 소유관계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가 직면한 역사적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1840년대 초반 해도 독일은 반세기 이후 지니게 될 경제 강국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영국과 프랑스에 견줘 독일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후진적이었다. 당시 독일은 통일된 국가도 아니었다(독일은 1871년에 통일됐다). 독일은 프로이센 절대왕정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가운데 왕국들과 공국들로 이뤄진 느슨한 연방이었다.

역사적 환경

마르크스가 태어난 라인란트는 독일의 전반적 후진성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지역이었다. 라인란트는 독일에서 가장 공업화되고 사회적으로 가장 진보한 지역이었다.

또한 프로이센에 병합되기 전인 1795~1815년에는 혁

명적 분위기에 젖어 있던 프랑스의 영토였으며, 이 지역에서 잘나가던 부르주아지는 독일에서 가장 급진적인 부르주아지였다. 프로이센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이 부유하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옹호하고자 〈라이니세 차이퉁〉을 창간하고 돈을 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검열에 반대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내건 주장은 지금까지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일갈했다.

검열은 “시민들의 최상의 이익과 정신을 후견하는 양 행세한다. … 우리는 자연의 매혹적인 다양성과 한없는 풍요로움에 경탄한다. 우리는 장미꽃더러 제비꽃 향을 풍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풍요로워야 할 정신은 왜 오로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정치적 자유를 누릴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

이다. 마르크스는 이

런 주장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한다.

“언론의 자유를 반대하려면, 그 사람은 인류는 영원히 성숙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집해야 한다. … 인류가 미성숙한 것이 언론의 자유를 반대하는 주장의 신비한 근거라면, 확실히 검열은 인류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합당한 수단일 것이다.”

검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교육은 한 사람을 평생 동안 포대기에 싸두는 것이라고 본다. 견기를 배우자마자 넘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견기를 배우려면 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포대기에 싸여 있어야 한다면 도대체 보살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모두 요람 안에 있다면 요람을 흔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모두 감옥에 있다면 간수 노릇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역사적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연히 통치자가 된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경찰은 누가 단속하는가?

그런데 마르크스가 국가의 언론 검열을 강력하게 공격했다고 해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기성 언론의 악행들도 모두 그대로 수용하는 인물이었다고 봐야 하는가? 마르크스의 실제 핵심 주장이 이런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마르크스의 목표는 단순히 언론의 자유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민주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더 넓은 투쟁의 일부로 봤다. 그는 이렇게 썼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말해, 인간 자유의 실현이다.”

둘째, 마르크스는, 〈라이니세 차이퉁〉 편집인 시절 사적 소유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할 때조차, 재산 소유자의 자유가 가장 가치 있는 자유라는 관념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가차없이 이렇게 썼다. “언론의 자유를 영리

추구의 자유보다 하위의 것으로 본다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그 자유를 죽이는 셈이다. … 확실히 저술가는 생활하고 글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생활하고 글을 써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민주적 자유는 신흥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전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민 정신의 파수꾼

마르크스는 자유 언론은 진정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들춰내야 하고 그 목적은 대중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해서 그 세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

비록 마르크스 자신은 이런 주장을 철학자 헤겔의 낡은 관념론(마르크스는 당시에는 아직 이것을 벗어 버리지 못했다)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말이다.

“자유 언론은 인민 정신의 파수꾼이며 인민의 신뢰 자체다. … 자유 언론은 인민의 거침없는 자기 고백이며 그 구속(敎贖)의 위력은 익히 알려져 있다. 자유 언론은 인민이 자신을 비춰 보는 정신적 거울이다.”

정말이지 마르크스는 날카롭게 말한다. “언론의 자유 중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영리 추구여서는 안 된다.”

즉, 마르크스는 저널리즘의 실천과 영리를 추구하는 언론의 행태를 구분한다.

언론학자 하노 하트트가 예리하게 관찰했듯이, 마르크스가 보기에 “언론의 자유 개념은 표현의 자유 실현을 함의한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그 개념은 언론인과 … 언론 소유자 자체를 포함한 민관(民官) 당국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인적·집단적 권리다.”

하트트의 결론은 마르크스의 견해를 잘 알려 준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다룬 마르크스 저작들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소유자로부터 언론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즉, 발행인과 주주들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마크 L 토머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3년 1월호
번역 천형석



독자의 목소리

“〈레프트21〉은 우리를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제가 〈레프트21〉을 처음 접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그때 제호는 〈맞불〉이었습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인 한 선배는 저와 여러 쟁점으로 토론하려고 하면서 꾸준히 신문을 권했고, 학교에서 신문을 꾸준히 판매하던 선배 덕분에 오랫동안 신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레프트21〉과 〈맞불〉을 꾸준히 사 본 이유는 주류 신문은 다루지 않는 투쟁 소식, 차별과 억압을 폭로하는 기사,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분석하는 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꼭 읽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미국에 교환 학생을 갔을 때도 학교 프린트로 컬러 인쇄해서 모두 스크랩했습니다.

〈레프트21〉과 〈맞불〉을 보며 운동 내 여러 쟁점, 대안, 투쟁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고 그 선배에게 질문도 하고 논쟁도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논쟁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관점을 하나하나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프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하게 해 주는 〈레프트21〉

21〉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겪는 소외나 차별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류 신문은 다루지 않는 투쟁 소식을 함께 읽고 함께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선배가 했던 것처럼 〈레프트21〉을 꾸준히 판매합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 〈레프트21〉을 꼭 챙겨 가서 권합니다. 그리고 ‘〈레프트21〉 독자 모임’을 구성해 사람들과 함께 〈레프트21〉에 나오는 여러 쟁점을 두고 토론합니다.

‘독자 모임’에서 사람들은 정말 활발하게 토론합니다. 〈레프트21〉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겪는 일과 관련한 쟁점들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통해 제 자신을 포함해 모임 구성원들이 모두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하게 해 주는 〈레프트21〉이 앞으로도 계속 발간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이 〈레프트21〉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

레프트21 100호 발행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세요

100호 발간 기념 기간(2013년 4월 18일까지)에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소책자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현재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소책자를 드립니다.

《배따이들을 위한 맑스 가이드》, 《배따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 《배따이들을 위한 트로츠키 가이드》, 《배따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 중 택1)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한 번 후원’, ‘정기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정기구독·후원 신청 방법

- ▶ www.left21.com(신용카드 결제 가능)
- ▶ 전화 02-777-2792
- ▶ 주변에 〈레프트21〉을 판매하는 지지자들에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후원을 신청하시고 100호 발간 축하·지지 메시지도 남겨 주세요.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배운다

신디컬리즘의 성과와 한계

크리스 뱌버리

민주노총이 지도부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 주듯이 노동운동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현장의 전투성을 강조하며 단결된 투쟁을 벌이자고 말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이런 태도는 개혁주의와 대립되는 정치세력화를 말하며 종파적 분열로 향하는 일각의 태도보다 분명 나은 점이 있다. 하지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한계도 봐야 한다. 그 점에서 20세기 초 영국에서 등장했던 신디컬리즘의 장점과 한계를 다른 글을 소개한다.

노동계급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명망을 쌓으려 드는 [영국]노동당, 파업을 배신하고 기업주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노동조합 지도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닌가?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20세기 초 갓 태어난 노동당은 집권 자유당의 응원 부대에 지나지 않았다. 파업을 조직해도 노조 지도부를 기소하지 않기로 규정한 법이 통과되자 노조 지도자들은 정부와 잘 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영국은 미국에,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에 경제적으로 추월 당하고 있었다. 기업주들은 이윤을 늘리고자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1900~10년 실질임금이 10퍼센트 떨어졌다. 식료품 가격이 상승했고, 기술이 발전해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다.

한 세대의 노동계급 활동가들이 이에 맞서, 그리고 ‘파업이 아니라 의회로 사회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는 노동당의 노선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의 행동으로 가능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했고, 노동조합을 그 수단이라고 봤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디컬리스트’라고 불렀다.

파업

1910~14년 임금 삭감에 분노해 후일 ‘대반란’이라고 알려진 파업 물결이 영국을 휩쓸었다. 파업이 확산하면서, 톰 만 같은 신디컬리스트 지도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1910년 만은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소책자를 써서 사회주의는 노동조합 운동으로만 이룰 수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썩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만은 기존 노조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을 하나의 거대 노조로 통합하려고 ‘산업신디컬리즘교육연맹’(ISEL)을 창설했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신디컬리스트들은 직접 행동을 중시하는 독립 노조를 만들었다.

1911년 영국 리버풀 항만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리버풀의 운수 부문 전체 파업으로 번졌다. 만은 비공인 파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수천 명이 참가한 대중 집회에서 연설했다.

자유당 정권은 [리버풀 근처] 머지 강에 전함을 파견했다. 정권은 8만 명이 운집한 대중 집회를 박살내려고 무장한 군부대를 파견했다. 군대는 파업 노동자 두 명을 사살한 끝에 파업을 파괴할 수 있었다.

1년 후 군대는 전국적 광원 파업을 파괴하는 데 투입됐다. 거기서 그들은 “쏘지 마시오”라는 표제를 단 신디컬리스트의 유인물을 발견했다. 만과 다른 한 명의 신디컬리스트는 “항명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911년 파업 중인 영국 리버풀 항만·철도 노동자들

“자본가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려면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

ISEL의 기관지 〈신디컬리스트〉의 판매량은 1912년에 2만 부로 치솟았고, 〈신디컬리스트〉가 두 차례 조직한 노조 대표들의 대회는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표방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행동에 집중했기 때문에 파업이 성장할 때는 기막히게 훌륭했다. 신디컬리스트 지도자들은 기존 노조나 노동당의 지도부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업 물결이 시들해지면서 신디컬리스트의 힘도 약해졌다.

톰 만과 글래스고의 윌리 갈라처 같은 사람들은 좌파 정당의 당원이면서도 ‘낮에는 노조 활동을 하고 밤에는 선전 모임에서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식으로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애썼다.

정치 투쟁

다른 신디컬리스트들은 정치 영역에서도 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완전히 일축했다. ISEL의 창립자 중 한 명인 AG 터프톤은 이렇게 주장했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치는 사람들의 개인적 문제다. 자유당이든 보수당이든 노동자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오직 노동계급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대반란’이 벌어지던 바로 그때 커다란 정치 투쟁 두 개가 영국을 뒤흔들었다. 하나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벌

인 여성 투표권 쟁취 투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 지배에 맞선 반란이었다. 게다가 영국·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돼 유혈 난자한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었다.

이런 투쟁들이 결합해 영국 국가에 맞서는 강력한 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 불행히도 신디컬리즘 경향의 활동가들은 그런 호소에 거의 응하지 않아서 운동을 정치적으로 건설할 수 없었고, 1914년 8월 전쟁[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유럽의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처럼 영국 노동당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노조 지도자들은 전쟁 수행을 도우려고 파업 금지 조처에 합의했다. 독일 “야만인”을 악마화하는 거대한 운동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톰 만을 비롯한 신디컬리스트들은 대체로 개인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전쟁 광풍에 맞설 수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1916년 즈음 파업이 활기를 되찾았다. 클라이드노동자위원회[1915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비공인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이 만든 현장조합원 조직] 회장이었던 신디컬리스트 활동가 갈라처는 정부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에 맞서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클라이드노동

자위원회의 직장위원들은 산업 투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반전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어려워했다.

심지어 갈라처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 존 맥클레인이 클라이드노동자위원회에 가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맥클레인이 클라이드노동자위원회가 전쟁 반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신디컬리스트들이] 산업 투쟁을 정치 투쟁과 결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노동당이 점점 커지는 전쟁 혐오 정서의 수혜자가 됐다. 노동당 지지율은 6퍼센트에서 1918년 20퍼센트로 올랐고, 4년 후에는 그 두 배로 올라갔다.

그럼에도 톰 만, 윌리 갈라처, 셰필드의 금속노동자 JT 머피 같은 신디컬리스트 지도자 다수는 1917년 러시아혁명에 매력을 느꼈다.

레온 트로츠키는 신디컬리스트들을 “자본가에 맞서 그저 싸우기를 소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자들과는 달리) 자본가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다.

불세비키는 언제나 파업을 지지했고, 대중 파업을 자본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국가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봤다.

투쟁에서 겪은 경험 덕에 불세비키는 노동조합 기층 조직을 지지했는데, 그런

기층 조직이 미래에 공장위원회나 소비에트[러시아혁명기에 만들어진 노동자 평의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층이 직접 선출하는 이런 조직은 투쟁을 이끌 뿐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 국가의 기초가 될 수도 있었다.

트로츠키는 신디컬리즘을 노동계급 내의 혁명적 경향이라고 규정했지만, 동시에 신디컬리즘의 심각한 이론적 결함 몇 가지를 지적했다.

트로츠키는 기업주들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매우 중요한 무기지만, 노동조합은 본질상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친다고, 즉 결국에는 맞서 싸우던 기업주들과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투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전투적으로 파업을 벌인 뒤에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혁명적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개혁주의적 방향으로 이끌린다. 총파업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도전하게 되지만 총파업만으로 기존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로츠키는 1905년 러시아혁명의 실패를 두고 이렇게 썼다. “투쟁에서 적의 힘을 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총) 파업의 구실이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파업은 혁명의 군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총파업이든 혁명의 군대든 그 자체로 국가 혁명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혁명은 옛 지배자들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 총파업은 그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창출할 뿐이다. 총파업만으로는 그런 과제[권력 쟁취]를 수행하지 못한다.”

권력 장악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를 우회할 수 있다는 주장에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국가 권력을 그저 부정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권력을 넘어서려면 국가 권력을 직접 장악해야 한다. 국가 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혁명적 정치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혁명적 계급으로서 필수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트로츠키의 지적은 노동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한다.

노동조합은 정치적 신념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한다. 그러나 언제나 노동계급 중 일부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분열적·애국주의적 사상을 거부하지만, 다른 일부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반동적인 관념을 모두 수용하기도 한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이들 중 어느 한 쪽이 다수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투적 소수가 정치 조직을 건설해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사실적으로** 중요하다.

1930년대 후반까지도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신디컬리스트와 혁명적 사회주의자 사이에 논쟁이 계속됐다. 이 논쟁에는 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과 스페인의 전국노동자연맹(CNT) 같은 대중적 조직들도 참여했다.

갈라처나 만 같은 일부 사람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공산주의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날 새로운 세대의 노동조합 활동가와 반자본주의자 들은 신디컬리스트 관련 논쟁을 보며 개혁주의의 영향력을 떨쳐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104호 / 번역 김인수



과거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급진파 지도자였던 존 리드가 1917년 러시아혁명을 목격하고 쓴 책 《세계를 뒤흔든 열흘》에는 볼셰비키 병사가 멘셰비키 학생과 논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대목이 있다.

학생이 험악하게 병사를 욕박질렀지만, 병사는 학생의 전제하는 타박에 단순 명료한 주장을 반복하며 반박했다. “이 세상에는 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있지요.”

극도로 화가 난 학생이 병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당신은 레닌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러자 병사는 “예, 그래요.” 하고 답한다. “그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더군요. 러시아에는 두 계급이 있습니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20년 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병사는 나에게 영웅 같은 존재였다. 그는 혁명적 정당에 관한 솔한 헛말을 단칼에 반박했다.

그 병사에게는 자발성이나 의식성이냐, 전위 정당이나 대중 정당이나 등에 대한 딜레마가 없었다. 그는 볼셰비키였다. 볼셰비키가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었지만) ‘볼셰비키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한다.’

레닌주의 정당 모델은 한물갔는가

물론 현재 우리는 혁명의 한복판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96년 전과 동일한 결정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와 싸워야 하는 임무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한다. 그들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함께 혁명적 정당을 건설하자.’

물론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학생 투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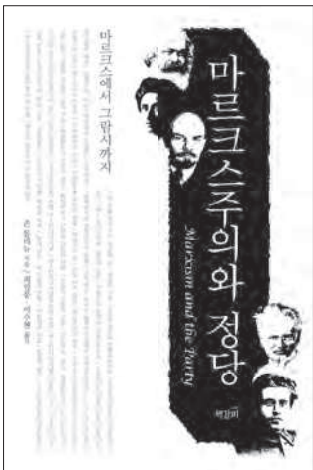
저자 존 몰리뉴가 2013년 한국어판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당에 반대하는’ 태도가 거의 합의처럼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새롭게 급진화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그렇다.”(14쪽)

이들은 혁명적 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라며 경기를 일으킨다. 또, 민주집중제는 ‘나쁜’ 지도부가 손쉽게 당과 운동을 조종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독재의 다른 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당이 민주주의와 중앙집중주



혁명이 성공하려면 대중적 운동과 함께 혁명적 정당도 필요하다 시위 대열을 이끌고 있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회원.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존 몰리뉴 지음, 최일봉·이수현 옮김,
책갈피, 264쪽, 13,000원

의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은 “당의 임무와 계급투쟁의 본질에서 직접 도출되는 결론이다.” “민주주의가 필수적인 이유는 당이 노동계급의 전지전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며 “중앙집중주의가 필수적인 이유는 당이 매우 중앙집중적인적, 즉 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격렬하게 투쟁해야 하기 때문이다.”(230쪽)

다른 한편에서는 “모종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좌파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혁명적 조직, 즉 레닌주의 조직이 아니라 ‘범좌파’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16쪽)

몰리뉴는 “광범한 급진 좌파 정당들이 출현하고 성장한 것은 노동계급이 좌경

화하고 있다는 징후이자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런 정당과 혁명적 정당 건설을 대립시키면서 범좌파 정당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은 좌파 개혁주의 정부들의 비극적 역사를 무시하는 셈이다.”(17쪽)

혁명적 정당이라는 사상은 한물갔다는 흔한 주장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마침내 묻어 버릴 새로운 대중 운동을 생각하지만, 아직 혁명적 정당의 사활적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투사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정당》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존 몰리뉴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로서, 복잡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해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가 <레프트21>에 기고한 글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간부를 넘어 광범한 진보 성향의 독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설명하는 법을 보여 주는 사회주의 글쓰기의 전형이다.

이 책도 매우 명료하다. 일곱 장(章)으로 된 책에서 몰리뉴는 마르크스·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그람시의 혁명적 정당에 관한 사상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노트 형식으로 마르크스주의 정당 이론의 주요 원칙과 오늘날 적용을 위한 핵심을 요약한다.

몰리뉴는 이 혁명가들의 혁명 정당 사상을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명판(名板)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혁명가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보편적 이론 전개에 멈추지 않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다룬다.

가령, 마르크스는 위로부터 배송되는 사회주의 계획, 권위주의적이고 음모적이며 선전 종파적인 당 개념을 완전히 배격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대체로 현대적 의미의 정당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당 개념은 모호하거나 숙명론적 요소가 있었다고 몰리뉴는 지적한다.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명판?

몰리뉴는 정당에 관한 레닌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상당한 분량(두 장)을 할애한다. 20세기 초 혁명 운동들에서, 특히 제1차세계대전 뒤에 일어난 혁명들에서 혁명적 조직 이론에 기여한 많은 개인이 있었지만, 그중 레닌이 단연 으뜸이었기 때문이다.

제정 러시아의 정치 현실에 영향을 받은 레닌은 초기 저작들에서 직업적 혁명가들로 이뤄진 당을 고안했다. 그러나 1905년 혁명을 경험한 레닌은 볼셰비키당이 노동계급 대중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자신의 관점을 바꿨다. 1917년 혁명 후에 레닌은 “세계 수준의 볼셰비키당”, 곧 중앙집중적 세계 당(제3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을 건설했다.

몰리뉴는 20세기 초 혁명가들의 논쟁도 살펴본다.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의 레닌 비판을 검토한다. 몰리뉴는 이 논쟁을 자본주의의 전복에 헌신한 혁명가들 간의 우애적 논쟁으로 본다. 그는 룩셈부르

크의 당 이론이 “그 자체로도 노동운동에 대한 유용한 무기”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룩셈부르크의 당 이론은 [레닌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레닌주의의 틀 안으로 통합되어야만 진정 유용한 무기다.”(161~162쪽)

몰리뉴는 스탈린과 스탈린파 관료들에 맞서 레닌주의 당 개념을 지켜 내고, 번질뻔 버린 코민테른이 아니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대안을 구축하려고 노력한 트로츠키의 “두 가지 유산”을 방어한다. 그와 동시에 1930년대 말엽 트로츠키의 빛나간 예측과 전망의 이론적 기초들을 대차대조표를 그려 가며 설명한다.

그람시를 사회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만 보는 사람들은 혁명적 조직에 대한 그람시의 공헌을 다룬 장이 새로운 것이다.

이 책은 1978년에 첫 출판됐다. 몰리뉴가 이 책을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레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주의 전통의 해석이 올바르게 특히 스탈린주의나 이른바 ‘정설’ 트로츠키주의의 해석이 틀렸음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14쪽)

몰리뉴가 염두에 뒀던 조직들은 많은 경우에 진정한 혁명 조직과 아무 관계가 없었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개혁주의에 영합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라지거나 잊혀진 정당들도 많다.

그럼에도 이 책과 이 책의 주요 주장들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거의 전부” 적절하다. 심각한 경제 위기, 고조되는 저항 물결, 기후 변화 등 자본주의의 위기들을 “감안할 때, 국제 사회주의 혁명과 그 혁명을 확실히 승리로 이끌 혁명적 정당 건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13쪽)

이때 우리가 과거 경험의 어깨를 딛지 않고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끝으로,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의 당 논쟁사》라는 제목으로 1988년에 처음 국역 출판된 이래 출판사를 옮겨 가며 몇 차례 출판됐다. 그러나 이번 판본은 역자들의 꼼꼼하고 수준 있는 번역 덕분에 아주 다른 책을 읽는 느낌이 든다. 이미 국역본을 갖고 있는 독자들도 꼭 사서 다시 읽기를 권한다. 1만3천 원이 결코 아깝지 않다.

김인식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저자 존 몰리뉴는 오는 7월 19일(금)부터 22일(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맑스즘 2013’ 포럼에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등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 사망 10주기

숨통을 죄는 억압의 굴레에 맞서 싸우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3년 4월 25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한 동성애자 고등학생이 목을 매 자살했다. 그의 호는 육우당, 시인을 꿈꾸던 19살 청소년이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성애 차별과 멸시였다.

육우당 동지는 동성애자 차별 조항 삭제 운동에 열렬히 참여한 활동가였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동성애자 차별 조항 삭제를 권고하자, 우익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결사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을 향해 온갖 쓰레기 같은 악담을 퍼부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유혈 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한기총의 역겨운 저주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육우당 동지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듯하다. 그는 유서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 규정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나 죽은 게 아깝지 않다고 봐요.”

많은 성소수자들이 육우당 동지의 죽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여겼다. 실제로 차별과 억압 때문에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두

세 배 높다.

억압의 굴레는 자본주의 체제와 단단히 엮여 있어서 성소수자들이 움직이는 매 순간 숨통을 조인다.

“더러운 호모 새끼”로 낙인찍히는 순간 “직장에서 내쫓기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군대에서는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가족에게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성애자인 척 ‘이중 생활’을 해 보기도 하지만 성 정체성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 매일매일 긴장하며 산다.

“죽은 뒤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동성애자다’라고요”라는 육우당 동지의 유서는 성소수자들

의 사무친 마음을 보여 준다. 그는 ‘굴방’ 속에 갇혀 있길 강요받는 성소수자들의 자화상이었다.

그러나 억압의 굴레에 맞서 값진 승리를 거둔 경험도 있다. 육우당 동지가 세상을 떠나고 1년 후, 남은 이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이 삭제됐다.

제작년엔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농성 투쟁을 벌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학성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우익들은 “동성애를 인정해 준다면 에이즈에 걸려 아이 출산을 하지 못한다”며 날뛰었다. 그

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저런 광기 어린 우익들이 ‘광왕’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굳건히 농성장을 지키며 싸운 성소수자들에게 연대했다.

육우당 동지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우리에게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투쟁을 당부하고 갔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되는 ‘부자연스러운’ 체제가 끝장나야 그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도 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숨통을 죄는 억압의 굴레가 없어진 “좋은 날”에 그를 기릴 수 있도록 투쟁하자.

양효영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4월 24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투쟁의 시동을 건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정규직화”(사실상 무기계약직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곧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의 압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벌써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 정부가 마지못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전환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호봉제를 도입하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고,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경력에 따라 고작 5만 원씩의 호봉을 지급하는 예산 8백8억 원조차 여야 합의로 전역 삭감해 버렸다. 노동자들에게는 1조 원은커녕 1천억 원도 아깝다는 것이다.

20만 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1백여만 원밖에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재원을 쓰지 않고 어떻게 “민생”이니 “복지”니 말할 수 있는가? 재벌·부자들에게 특혜 줄 돈은 있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할 돈은 없단 말인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올해 추경예산에 호봉제 예산을 포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운운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열린 한 공청회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호봉제와 정년을 보장한다면 공무원으로 보이지 않냐”고 했다. 이들은 파렴치하게도 서울시교육청의 한 노조 위원장을 내세워 “기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을 말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을 갈라놓으려는 저열한 이간질에 불과하다. 각종 구조조정으로 교사와 공무원 들을 공격해 온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공무원을 위하는 양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반갑다. 전교조도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4월 8일 교과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노동자들.

파업을 지지했고, 최근 일부 교사들이 ‘올해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는 호소를 시작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10년차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적어도 호봉제를 도입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46퍼센트

올 초 대량해고 사태가 보여 주듯, 상시적 고용불안도 매우 극심하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운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실제 조례가 제정된 광주·전남 등에선 해고 노동자들의 수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었다). 이미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요구하는 교육공무직법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교육부·교육청의 직접고용, 공무원의 80퍼센트에 준하는 처우 보장, 정년 60세 보장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담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 관철된다면, 더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세연은 “(교

육공무직 전환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불러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최근 6월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연대회의는 최근 교육부 앞 농성과 집회를 시작하며 올해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물론, 1퍼센트의 대변자 박근혜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연이은 고위직 인사 ‘참사’와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집권 초기부터 위기를 겪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역사적인 첫 파업으로 잠재력을 보여 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광범한 지지 속에 자신감을 높여 왔고, 조직도 성장했다. 그 결과 현재 5만여 명이 노조로 조직됐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단결해 싸운다면, 차별과 설움에 시달리는 많은 노동자·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며 올해 더 큰 전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더 넓은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도 자극할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연대하자.

조명지

국민대

발빠른 항의로 법무학과 폐과 시도를 저지하다

4월 초 국민대학교 당국의 법무학과 폐과 시도가 학생들의 발빠른 항의로 저지됐다.

학교 측은 정부 지원이 줄었고, 법무학과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라며 법무학과 폐지를 강행하려 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도 설립한 지 얼마 안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학부를 졸속적으로 통폐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법무학과를 졸속적으로 폐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학교 당국의 장기적 안목 없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에 애꿎은 학생들만 고통받아 왔다.

학교 당국이 졸속적인 폐과를 추진한 데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다. 정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대학평가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구조조정을 부추겼다.

이를 위해 국민대 당국은 수익도 잘 나지 않는데다, 야간대생으로 이루어져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법무학과 학생들을 먼저 공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가 난다는 것이 학과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유지수 총장은 ‘학과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 하고 답변한 바 있다. 법무학과 폐과 시도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었다.

학업의 꿈을 이루려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견뎌온 법무학과 학생들은 졸지에 학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분노했다.

이에 법무학과 학생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면적인 수업 거부로 항의했다.

법과대학 학생회도 법무학과 폐과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도 이것이 단지 법무학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며 법무학과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승리

학생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압력을 받은 학교 당국은 법무학과 폐과 문제를 올해 안에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는 법무학과 학생들 자신이 적극 항의하고 다른 과 학생들도 이에 연대한 결과다. 법무학과 폐과 시도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다른 학과 학생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도 같은 논리로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학교 당국이 법무학과 폐지에 성공했다면 수익성과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다른 학과들도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학교 당국이 내년에 또다시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공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럴 때 구조조정이 몇몇 소수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설득해서 이번처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개별 대학들에 정원 감축 압력을 넣고 있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도 맞서야 한다.

이아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 활동가

충남대 청소 노동자 투쟁

해고를 철회시켜 투쟁의 자신감이 커지다

2월 말 부당해고 당한 청소 노동자 두 명이 4월 1일 새 업체와 계약하며 복직했다. 두 노동자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유성지회(민주노조) 소속이었는데,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해고됐다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 승리했다.

두 노동자가 고용돼 있던 용역업체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인사이동을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실시했다.

용역업체는 자신이 주도하는 국민노조 소속 조합원이 많은 건물로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을 배치하고 ‘민주노조 가입하면 잘린다’는 소문을 내는 등 협박과 막말을 일삼았다.

충남대 당국은 용역업체와 노조의 문제일 뿐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2011년 용역업체가 부도나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을 때도 학교 당국은 새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학교 당국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다.

학교 당국은 노동자들이 대학본부 일부를 점거하고 싸우자 겨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업체한테 당한 비인격적 대우, 학교 당국의 무책임함 등으로 불만이 쌓여 있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동자들은 학내 집회, 서명운동, 홍보전 등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며 투쟁했다.

지지

서명에 4천 명 가까이 참가할 정도로 학생들의 지지도 높았다. ‘레프트21’ 독자 모임 소속 학생들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노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대 활동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학생들의 연대 활동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2명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업체한테서 받아 낼 수 있었다.

이번 승리로 청소 노동자들은 ‘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층 높아졌다.

정기민

학생총회 이후 원광대

뻔뻔한 학교 당국에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때

3월 28일 10년 만에 원광대학교에서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가 성사됐다. 학생 2천3백여 명이 문화체육관을 가득 메웠고, 총회 성사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총회는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 폐과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요구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고액 등록금에 고통받으며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총회가 성사된 후 등록금을 더 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총회 성사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총회 당일에는 학생 요

구안 논의를 위한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말이다.

심지어 총회가 성사됐다고 거짓 보고를 했으며 총학생회더러 사과하라고까지 한다. 비싼 등록금과 구조조정으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준 학교 당국이야말로 당장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축제와 체육대회 등 사업에 대한 결재와 지원을 중단했다. 이는 분명히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

4월 8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런 막돼먹은 학교 당국에 맞서 항의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환으로 4월 10일에 항의 방문을 가기로 했다. 조직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학생 50여 명이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학생처를 찾아가 학생 요구안을 수용하고 학생 자치활동 탄압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교 측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조금치도 없는 듯하다.

이런 학교 당국을 움직이려면 학생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총회는 학생 요구안 실현을 위해 “본과 항의 방문과 대중적 분관 점거” 같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제 학생들을 무시하는 학교 당국에 맞서 점거 투쟁 같은 강력한 행동을 건설할 때다.

박영준 원광대학교 학생

독자토론광장

4월 24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의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열세 살 초등학생도 모두 아는 이야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다. 교과서 외 자료 활용을 즐겨 공부하는 우리 반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기사를 국어과 텍스트로 활용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 스럽없이 의견을 냈다.

“우리 할머니도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오래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와서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진주의료원 같이 좀더싼 ‘나라병원’이 꼭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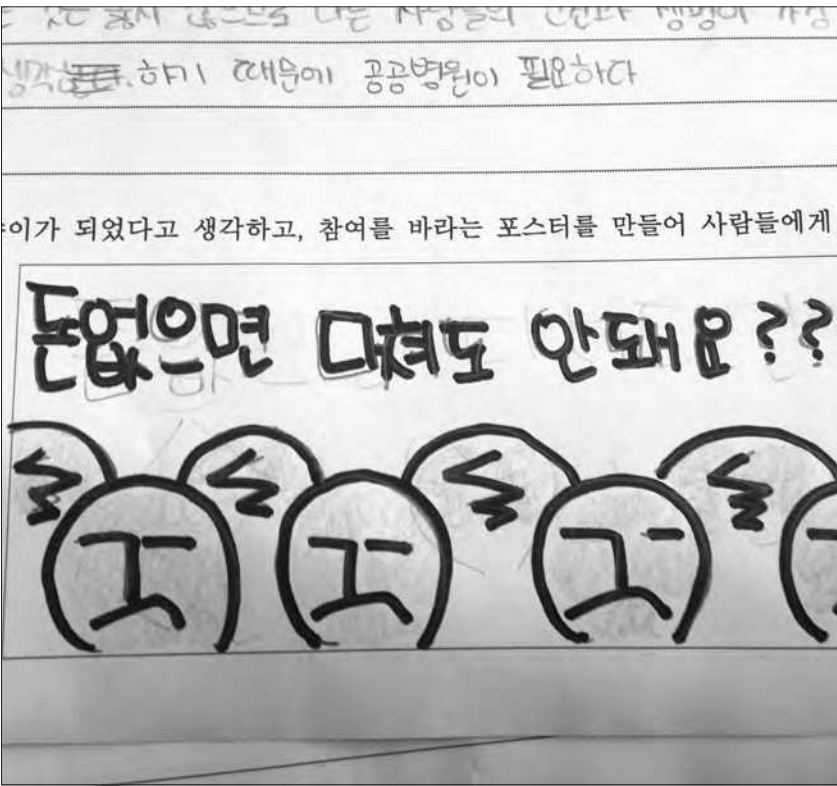
“우리 반 규칙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다고 도청이 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도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 같아요.”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도지사를 믿고 뽑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민간병원에서 돈이 안 된다며 쫓겨난 환자들이 또다시 ‘나라병원’에서도 쫓겨나야 하다니요?”

한 학생은 돈벌이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가버리려 한다는 점에서 흉준표 도지사를 만화《원피스》80화 ‘의사가 없는 섬’에 나오는 최악의 왕 ‘와포루’와 닮았다고 꼬집었다. 와포루는 자신의 주치의 20명만 놔두고 국민을 치료할 의사를 모조리 추방시킨 후, 이렇게 말한다. “국민들의 병 따위가 나랑 뭘 상관인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윤 추구에 목매는 자본주의의 끔찍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병원 평균 입원비의 67퍼센트를 받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적자인 것은 당연한데도, 이를 빌미삼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흉준표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현 시대의 ‘와포루’였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 서비스마저 이윤 추구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쥐꼬리만큼 제공하던 사회안전망조차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6퍼센트도 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돈 없으면 치료 받지 말고 그냥 죽어라’ 하는 것이다.



“돈 없으면 다쳐도 안 돼요?”

진주의료원 폐업은 ‘돈 없으면 치료 받지 말고 그냥 죽어라’는 말과 다름없다.

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교사로서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망감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재정 적자를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사 노동자인 나에게도 고스란히 퍼부르 다가온다.

강성노조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 때문에 적자가 나고 폐업한다는데, 군산의료원은 토요 휴무에도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흑자랍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밤이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야 하지 않겠어요? 뭘가를 노력해야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매칠 전 전시 행사를 중단하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학교 관리자가 반박하며 내뱉은 말이다.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이 사회의 지배계급이 앞으로 재정 적자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누구에게 전가하려 하는지를 예상케 한다.

이런 도지사와 정부가 있는 한 생명과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은 더 ‘강성’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생명과 의료 공공성을 지키려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경남도민들, 질 좋고 싼 가격의 ‘나라병원’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6학년 학생들의 메시지를 전해 본다.

열세 살 학생들도 모두 아는 이야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도청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박주연 초등학교 교사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는 대화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매칠 전 같은 과 신입생과 쌍용차 문제로 토론했다.

후배의 아버지는 쌍용차 노동자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이른바 ‘산 자’였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의 아버지는 2009년 파업 때 사측 대열에 있다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머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 후배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면서도,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경인 듯했다. 구조조정 이후 노동강도는 더 강화됐지만 아버지 월급은 절반 가까이 삭감돼 다섯 식구가 먹고살기 버거워 어머니도 부업을 하셔야 한단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는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후배의 아버지는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면 공장 안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반목하게 된 원

인은 무엇일까? 쌍용차 노동자들이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어 싸우게 만든 것은 악랄한 사측과 정부였다. 사측은 2009년에 정리해고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해 ‘희망’퇴직서를 쓰게 했고, ‘산 자’들을 동원해 파업을 파괴해 동료들끼리 싸우도록 종용했다. 최근 사측이 무급 휴직자들만 복귀시킨 것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성과이긴 했지만, 해고자와 무급휴직자를 이간질하려는 꼼수이기도 하다.

“함께 살자”

우리 운동은 이런 비열한 이간질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2009년 해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고 호소했다. 최근 쌍용차지부가 무급휴직자들의 복귀를 환영하고, 노동자들의 화합을 강조한 것도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려는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일감 부족과 낮은 임금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공장 안 노동자들은 사측이 말

하는 ‘해고자 복직이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식의 논리에 흔들리기 쉽다.

더군다나 상하이차에 이어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노동자들의 불안도 자라나고 있다. 이런 때에 공장 안팎 노동자들의 고용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은 쌍용차를 공기업화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루려면 ‘쌍용차 공기업화’ 요구가 필요하다.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도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에 불안해하며 쌍용차 공기업화 대안에 깊이 공감했다.

“함께 살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누구나 해고자가 될 수 있는 경제 위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 외침이 평택 공장 안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울려 퍼지면 국정조사 요구와 해고자 전원 복직 외에도 쌍용차 공기업화라는 요구가 필요하다.

이아혜 국민대학교 학생

환자는 돈으로 간호사는 기계로 보는 병원

“병실료가 17만 원이니까, 간호사를 17만 원어치 부려야겠어.”

매칠 전 몸도 가누지 못하는 한 환자를 혼자 붙들고 땀을 빼질빼질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히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내용이였다.

수술을 앞두고 하루 전날 미리 입원한 이 환자는 입원할 때 원무과에 다인실을 신청했으나 다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 입원비가 17만 원인 2인실에 입원한 상태였다.

원치도 않게 입원한 하루 17만 원짜리 ‘고급 병실’이 생각보다 훨씬 비좁고 낡아 빠져 억울했던 이 환자는 원무과와 간호사실에 불평을 토로했으나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만 들었던 듯하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고스란히 간호사에게 투사됐다.

다인실을 적게 만든 것은 간호사가 아니라 병원인데 그 불만을 간호사에게 투사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환자를 돈동치로,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탐욕스런 병원이다.

사실, 이 환자가 입원했던 2인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1인실은 하루 입원비가 30만 원이 넘는다. 창문이 남쪽으로 뚫린 방은 더 비싸다. 이쯤 되니 여기가 병원인지 호텔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가끔 건강검진 받으러 입원하는 ‘VIP

환자’들은 1인실을 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원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좁은 곳은 병실뿐이 아니다. 환자에게 투여될 약과 물품을 준비하는 간호사실이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의사실이며, 환자의 오물을 처리하거나 오염된 침구를 보관하는 곳 모두 비좁다.

비좁은 병실에선 보호자들이 간이 침대를 이어 놓고 새우잠을 자고, 간호사들은 새우잠을 자는 보호자와 환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일한다. 뒹대기 시장이다.

어쩔 수 없이 ‘고급 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돈 낸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한숨 돌릴 시간도 없이 뛰어다녀도 17만 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갖가지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환자 옆에서 간호할 시간은 충분치 않다.

“간호사를 17만 원어치 부리겠다”는 환자의 불평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환자가 지불한 하루 병실료 17만 원과 식사 시간도 없이 일하는 병원 노동자들한테서 뽑아낸 이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쓰이는 것일까.

백선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법정에서 느낀 것

‘비참한 사람들’에선 너무나 가혹한 “법과 질서”

나는 쌍용차 관련 재판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이른바 “잡범”들의 재판을 보게 됐다.

첫째 피고인은 만화책 6권을 훔치려 해서 기소됐다. 검사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다. 둘째 피고인은 5만 원을 훔친 사람이었다. 그도 벌금 1백만 원이 구형됐다. 셋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행인을 친 사람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119에 전화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근처 경찰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다.

나는 그들의 행위에 견줘 검사가 구형하는 벌금이 너무 과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즘 박근혜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부패 경연대회’와 ‘낙마 쇼’에 대면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연일 터지는 장·차관 후보들의 비리를 보면, ‘인사 청문회 장소 앞에 경찰을 배치해 바로 체포해야 할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세금 탈루, 직위 남용 축재 등을 저지른 자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고, 온갖 추문의 판도라 상

자인 ‘별장 게이트’ 수사는 너무 더디다.

피고인 세 명 모두 과중한 벌금 때문에 스스로 ‘비참한 사람들’이 됐다. 그들은 판사를 올려다보며 지병과 금전적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기계적으로 구형된 벌금의 반액으로 선고를 내릴 뿐이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검사는 권위적이기 짝이 없었다. 중간에 말을 자르고 비아냥대며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방해했다. 과연 그 검사는 부패 의혹이 30개가 넘는 이동흡과 김병관 같은 자들 옆에서도 그렇게 이죽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부조리를 보며 숨이 막히고 열이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주체인 검찰은 평범한 사람의 작은 잘못 앞에서는 정의의 사도인 척하며 거품을 물고 단죄를 외친다. 그러나 부자와 고위 관료의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앞에서는 그것을 정당화할 법구절을 찾기에 바쁘다.

이 자들은 뺨 한 덩이 훔친 장발장의 얼굴에 침 뱉기 좋아하는 부패한 프랑스 왕정의 앞잡이들과 다를 바 없다.

양효영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울산 지회
울산 개발 부도, 금융 부실, 수출 감소 성장을 둔화 ...
한국 경제는 어디로? —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연사 : 이정규(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4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 (학생 할인 2,000원)
문의 : 010-5004-1880

추치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정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